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해온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9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국가직 시험임에도 지방행정파트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인데, 문제의 내용 자체가 '주민참여의 수단'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파트로 수업시간에 충분히 강조한 포인트들이 출제되어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직 9급을 시작으로 2019 공무원 채용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점수에 만족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아래의 해설을 충분히 참고해서 남은 지방직·서울시 시험까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2. 출제영역분석

총론	1	재무행정론	3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6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9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8	-	1	4	-	3	4

0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위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② [X] 이슈네트워크는 정부부처의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정책공동체에 비해 경계가 모호하고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이슈네트워크에 비해서 정책공동체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summary |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여자	•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 개방적, 모호한 경계	•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 X
교환관계	일부 참여자만 자원을 소유	참여자 간 동등한 자원을 소유
권력관계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연계작용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협력적, 신뢰
권력게임	영합게임(zero-sum game)	정합게임(positive-sum game)
예측가능성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배 경	미국식 다원주의	유럽식 사회조합주의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05~207



0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② [X]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③ [O] 동법 제19조 제1항

동법 제19조 【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O] 동법 제7조 제3항

동법 제7조 【기관장의 임용】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0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③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해설】 ① [X]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O] 동법 제20조 제1항

동법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O] 동법 제16조 제1항

동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O] 동법 제14조 제1항

동법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44~849



- 【해설】
- ㄱ [X] 허용사항 외에는 모두 규제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며,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이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 ㄴ [O] 사회적 규제란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적정하게 다뤄지지 않는 가치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로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가 대표적이다.
 - ㄷ [O]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성격을 띤다.
 - ㄹ [O]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ㄱ.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9, 31, 35

▶ ④

| 법령 문제 |

0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설】 ① [X]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O]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정의】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 ③ [O] 동법 제20조 제1항

동법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O] 동법 제18조 제3항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03~306



10

| 말 바꾸기 + 제도 및 이론헌교 |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 【해설】
- ① [O] 이승만 정부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여 1952년 전시 중 일부 지역의 시·읍·면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X] 지방자치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의 포고령에 의해 지방정부가 해산되고,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당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고,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61년 중단된 이후 30년 만에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 ③ [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졌다.
 - ④ [X] 정당공천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 기초·광역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 이어 2006년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이 이뤄졌다.

▶ 올바른 지문

- ② 박정희 정부때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1995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97~799



| 개념 |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② 사회적 인간관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④ 복잡한 인간관

【해설】 ① [O]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이며,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로 본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88~390



| 개념 |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평정법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 ③ 중요사건기록법
- ④ 강제배분법

【해설】 ④ [O] 집중화경향, 관대화경향, 엄격화경향 등 분포상의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배분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10, 514



| 말 바꾸기 + 개념 |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③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해설】**
- ① [O] 조세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X] 국공채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큰 투자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O]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서비스의 직접적 혜택이나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재원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O] 조세를 통한 자본시설은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4

▶ ②

| 말 바꾸기 + 개념 |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 【해설】**
- ①, ② [O] 위원회 조직은 복수의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나타난다.
 - ③ [X]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④ [O]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진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75~377, 567

▶ ③

| 말 바꾸기 + 이론비교 |

15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 【해설】**
- ① [O]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리더십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리더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어 성공적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구분이 모호함 등이 있다.
 - ② [O] 행태론적 연구는 리더의 자질이 아닌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 ③ [O] 상황론적 연구는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 행동 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 ④ [X]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혁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혁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07 ~ 414

▶ ④

16 | 말 바꾸기 + 이론비교 |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②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③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④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해설】**
- ① [X]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유의성(Valence)이다. 수단성(Instrumentality)은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 ② [O] 허즈버그(Herzberg)는 만족요인과 불만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닌 만족이 없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닌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보았다.
 - ③ [O]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 ④ [O] 매슬로우(Maslow)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약해지며 충족된 욕구는 동기유발요인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았다.

▶ 올바른 지문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유의성(Valence)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summary | 브룸(Vroom)의 V.I.E 기대이론의 주요 변수

기대감(Expectancy)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0≤기대감≤1)
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1≤수단성≤1)
유의성(Valence)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유의성, 0유의성, -유의성)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92, 393, 395, 396, 402

▶ ①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 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O] 유연근무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X]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20시간, 5시간 범위 내 조정가능)을 근무하는 것이다.
 ③ [O] 탄력근무제는 조직구성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근무시간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④ [O] 원격근무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실(직장)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20시간, 5시간 범위 내 조정가능)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75, 529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 ① 역할연기
- ② 직무순환
- ③ 감수성 훈련
- ④ 프로그램화 학습

【해설】 ③ [O]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감수성 훈련은 외부환경과 격리된 장소에서 훈련 집단을 형성하여 구성원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는 훈련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03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 ②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③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④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해설】 ① [X]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장점으로 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에 해당한다.
 ② [X]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다.
 ③ [X]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된 것은 계획예산제도이다.
 ④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투입지향적·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는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8~698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해설】 ① [O]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 금액 내에서 산하 재무관에게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이다.
 ② [X]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세항 - 목) 간의 상호용통으로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다.
 ③ [O] 예비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지정할 수 없다.
 ④ [O] 사고이월은 예산성립 후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금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58, 663 ~ 665

